

오피니언

11

사설

제세동기 실효적 안내 체계 구축해야

지난달 10일 이과대학 전공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이를 계기로 양 캠퍼스에 제세동기 설치를 전면 확대했다.

서울캠은 제세동기가 기존 3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국제캠은 제세동기를 기존 13개에서 8개 추가할 예정이다.

심정지 사건은 학생의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순간이었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모두 다른 강의실로 이동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현장에 있던 교직원들은 학생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복용 중인 약을 묻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무사히 이송됐지만 아쉬운 순간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학생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제세동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

다고 한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제세동기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아 당시 심정지를 겪은 학생의 응급처치가 지체됐다. 심정지 학생은 나흘 후에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서울캠에 제세동기가 부족했으며, 사건 발생 대응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심정지의 경우 1분 1초가 중요한데, 만약 1초라도 빨리 제세동기가 학생에게 사용되었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일 수 있었다. 반대로, 1초라도 늦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을 것이다. 자칫 큰 사건으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학교가 그냥 넘기지 않고 제세동기 추가 설치로 재빠른 대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 기기를 확보한 것은 이제야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발걸음을 뒀을 뿐이다.

이번 제세동기 설치 확대는 일회성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안

“

제세동기 설치 확대가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우리학교 응급 대응 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자리잡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전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배치뿐만 아니라 제세동기가 캠퍼스 내 어느 건물, 어느 장소에 비치됐는지 우리학교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사용법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적, 물리적 안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교육을 설계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처럼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교육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도 원활하게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세동기 사용을 위한 홍보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심정지 사건으로 인한 제세동기 설치 확대가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우리학교 응급 대응 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자리잡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길 바란다.

세시봉

민주주의 조건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한국정치론 강의에서 교수님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때수업마다 낸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정치는 다원화된 의제를 수용하지 못한다”던 그는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쟁점을 사법부가 처리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주의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된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등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의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건이 주요 사례다. 법에만 충실해야 하는 사법이, 일부 집단과 대중들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다져온 민주주의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기에, 그 교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서 멀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기사를 볼 때마다 사법부의 불신이 축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정당에 불리한 사법 결과를 나올 때, 판사 직선제를 들먹이기도 한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말을 던졌다. 하지만 현대 민주 국가의 기본 철학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판사 직선제의 길로 들어선 멕시코는 내부 반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 투자 은행은 사법 개혁으로 투자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의 선고가 법리적인 판단보다 유권자나 정치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보류했다. 투자액 감소는 곧 고용 하락, 폐소화 가치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온다.

법원의 낮은 신뢰는 단순히 판사 직선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정에서, 상식적인 법관의 판결이 나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진정한 융합을 위해

취량사악 융합전공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 융합전공은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융합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공 간 연계성 부족이다. 현재의 융합전공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두 학문이 따로 존재할 뿐이다. 이는 자체 개설 강의 수에서 드러난다. 심지어 일부 융합전공의 자체 개설 강의는 전무하다. 그저 기존 전공과목을 나열하는 수준이다.

컨트롤타워 역시 부실하다. 현재 융합전공은 주관학과가 운영을 담당해 원소속 학과의 교수들이 융합전공까지 책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담당 조교 역시 배정되지 않아 교수진에서 홍보와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

다. 결국 피해는 학생이 입고 있었다. 융합전공으로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의 이점만큼은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공지조차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취업 정보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융합전공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전공 간 경계를 허물어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융합학과 취지는 분명히 좋다. 하지만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취량사악(取良捨惡)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융합전공 연재를 위해 많은 대학을 알아보고, 담당자와 연락하곤 했다. 취재해보니 융합전공의 원활한 운영이 난제는 아니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학생에게 진정한 의미의 융합전공을 제공하려면 타학교의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학교의 나쁜 것은 버리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만평 융합전공 부실 문제로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